

회원 67만명 광주·전남 재향군인회 변화 바람 30년만에 사병 출신 회장 나온다

장교 출신 2명 부정선거 낙마 금품받은 담양·곡성·장성지회장 징계위원회서 직무정지 조치 학군 위주 조직 재편 목소리 커 병장 출신 2명 출마...30일 선거

회장 선거 때마다 금품살포, 파벌싸움으로 얼룩졌던 광주·전남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에 사병 출신 회장 선출이 30년 만에 예고되는 등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올해 신입 회장선거운동 과정에서 장교 출신 후보들이 금품을 살포하다 적발돼 중도 하차하면서 견고했던 학군 내 '계급 사회' 문화가 깨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67만명 회원을 대표하는 광주·전남재향군인회장은 연간 13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지역내에서는 단체장급 예우를 받는 자리다.

27일 광주·전남재향군인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예정됐던 제39대 광주·전남

재향군인회선거에 출마한 ROTC(학군) 출신과 3사관 학교 출신 후보 2명이 곡성, 담양, 장성지회장과 나주, 함평 사무국장에게 돈봉투와 과일상자 등을 돌렸다가 후보자격이 상실돼 선거가 무산됐다.

광주·전남재향군인회는 지난 1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게 금품을 받은 지회장·사무국장 등 7명에 대해 직무정지, 감봉을 결정했다. 현재 중앙회(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금품수수 혐의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김모 장성지회장은 "돈봉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다음날 돌려줬다"면서 "억울한 면이 있어 중앙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해명자료를 냈다"고 밝혔다.

이번 금품수수 파동으로 그동안 장교 출신들이 독식해온 재향군인회장 자리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실제 오는 30일로 재공고된 회장(임기 4년)선거에는 이례적으로 사병 출신인 나중수(62) 광주동구재향군인회장과 정기모(64) 광주남구재향군인회장이 출마표를 던졌다. 이들은 모두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1952년 재향군인회가 창립한 이래 광주·전남에서 병장 출신이 회장에 오르는 경우는 총 4번뿐이다. 25·26대 회장(지난 1988년 1월~1989년 4월)을 역임한 김종택 회장을 끝으로 지난 30년간 그 명맥이 끊겼다.

사병 출신 후보들만 회장 선거에 나온 배경에는, 각종 금품선거를 비롯한 경직됐던 학군 조직의 혁신을 요구하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두 후보가 각각 주요 공약으로 '자율적 운영권 부여', '의사소통 활성화 구축'을 내세운 이유다. 특히 학군 출신 중심의 재향군인회 운영방식을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일부 시·군 지회장은 "현재 재향군인회는 학군 출신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 다수의 학군 출신이 회장 등 임원을 비롯한 자체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학군 출신 회원들이 육군사관학교나 3사관학교, 부사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회장을 연이어 배출한 것과 무관치 않다.

27대 회장부터 지난달 2월 임기가 끝난

38대 회장까지 모두 학군 출신 예비역 장교들이었다.

향군조직 특성상 군대의 '상명하복'식 계급문화와 특경제과 중심의 회장단이 형성되다보니 조직운영은 물론 회장선거 등에서도 각종 편법과 불법적 요인이 많다는 게 일부 회원들의 주장이다.

그동안 재향군인회는 일반적으로 각 시·군·구 지회별로 정회원 모집 할당량을 제시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예산 등에서 불이익까지 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광주·전남재향군인회는 지난달 20일 선거무산을 조직쇄신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재 각 후보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정관에 따라 문자메시지와 SNS를 통한 선거활동을 할 뿐 대의원과는 직접 접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전남재향군인회 관계자는 "지난달 선거무산으로 재향군인회의 민낯이 드러났지만, 오히려 깨끗한 선거와 조직을 쇄신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조폭 낀 대출사기단 무직자 위장 취업·서류 위조 대출 수수료 챙긴 24명 적발

신용이 낮은 무직자들을 위장 취업시키거나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게 한 뒤 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사기 혐의로 관리책 3명을 구속하고 총책과 모집책, 대출자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미 다른 범죄 혐의로 수감된 총책 신모(34)씨는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인맥을 이용해 모집책과 관리책 등 사기단을 꾸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유소나 회사 등에 위장취업시킨 뒤 신청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의 30~40%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3~6개월간 대출 신청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신용등급을 올려 시중은행 13곳에서 총 16억60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았다.

이들은 또 같은 날 여러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대출을 받는 속칭 '원라인 작업 대출' 수법으로 금융기관들이 대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우레탄 걷어내고 친환경 운동장으로 27일 광주시 북구 광주제일고 운동장에서 중장비 기사들이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우레탄 인조잔디를 친환경 마사토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학교측은 이달 말까지 6억50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경찰, '담비 대납' 관련 민주당 전남도당 수사 본격화

경찰이 '담비대납'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27일 영암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전남 오후 무안군 삼향읍 소재 민주당 전남도당 사무실에서 121명의 입당원서 사본을 확보했다.

경찰은 앞서 관리당원 확보를 위해 173명분의 10개월치 담비를 대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당 당원 A(여·54)씨와 남동생 B(50)씨를 입건해 조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영암 한 농협 지점을 찾아 민주당 전남도당 계좌에 담비 173만원을 입금했으며, A씨에게 송금 사

실을 들은 전남도당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입금을 취소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원들의 연체된 담비를 대납하려 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입금액 중 50여만원만 자신의 돈이고 나머지는 당원들에게 개별적으로 걸었다면서 다른 사람의 사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18년만에 바로잡은 진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단죄...징역 15년 확정

사건 전말은 목격자 신고했다 되레 범인 몰려 10년동안 억울한 옥살이 끝 출소 검·경 2003년 진범 잡고도 석방 박준영변호사와 재심 청구 무죄 지난해 영화로 제작되며 큰 관심

진실을 바로잡는데 꼭 18년이 걸렸다. 최모(33·당시 16)씨는 2000년 8월 우연히 살인사건 현장을 목격하면서 고난의 길로 들어섰다.

최씨는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에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기사 유모(당시 42)씨가 피를 흘린 채 운전석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봤다.

아버지를 일찍 여윈 뒤 10대 초반부터 돈벌이에 나섰다 최씨는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다방 배달일을 하던 중이었다.

최씨의 신고로 예리한 흥기에 12차례나 찢린 유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날 새벽 숨졌다.

최초 목격자인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에서 남자 2명이 뛰어가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하는 등 적극 협조했지만, 경찰은 그를 범인으로 몰기 시작했다. 강압에 못 이긴 거짓자백이 결국 그를 범인으로 만들었다.

경찰은 최씨가 택시 앞을 지나가다가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오토바이 공구함에 있던 흥기로 유씨를 살해했다고 발표했다. 경찰 발표와는 달리 최씨가 사건 당시 입은 옷과 신발에서는 어떤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재판은 정황 증거와 진술만으로 진행됐다.

범인으로 몰린 최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년 만기출소했다. 수감 생활 중이던 2003년 3월 진범이 잡혔다는 희소식이 들리기도 했지만, 또 다른 고문의 시작이었다.

사건 발생 2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당시 군산경찰서 황상만(64) 강력반장은 진범을 알고 있다는 증인 임모씨로부터 '친구 김모(당시 19·현재 37)씨가 사건을 저질렀고, 한동안 내 집에서 숨어 있었

다'는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용의자 김씨는 경찰에 붙잡히자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진범이 잡히면서 그동안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과 검찰은 발라 뒤집혔다. 유죄 판결까지 내린 법원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였다.

결국 진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됐다. 범인이 이미 검거돼 복역 중이라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풀려난 김씨도 이혼한 부모에게 충격과 고통을 겪어 재결합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구제적인 물증이 부족하고 사건 관련자의 진술이 바뀐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진범 김씨는 재판 한 번 받지 않고 혐의를 벗었고, 개명한 뒤 회사원으로 살았다.

최씨는 이후 한동안 두문불출했다. 또 한번의 반전은 재심사건 전문가인 안도출신 박준영 변호사가 등장하면서 시작됐다. 최씨는 박 변호사의 설득으로 2013년 3월 광주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6년 11월 "최씨가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재심 선고 직후 검찰도 김씨를 구속할 수 없었다. 1·2심 모두 진범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진범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개봉한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됐다. 박준영 변호사는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지고 단죄가 이뤄져 다행"이라며 "진범이 따로 있는 현장에서 목격자인 15살 소년을 범인으로 만들고 이 소년이 복역 중인 상황에서 진범을 풀어준 당사자들은 아직 진실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당시 수사진의 속죄를 촉구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7월 법원 판결로 형사보상금 8억4000여만원을 받았다. 이 돈의 5%를 사법 피해자 조력 단체에 기부하고, 진범 체포에 결정적 도움을 준 황상만 반장에게도 5%를 전달했다.

/박진표기자 lucky@연합뉴스

출소하면서 다른 재소자 운동화 몰래 신고 간 20대 경찰서행

○...구치소에서 출소하면서 다른 재소자의 3만8000원짜리 운동화를 몰래 신고 나간 20대가 또다시 경찰서행.

○...27일 부산사상경찰에 따르면 A(22)씨는 지난 1월 23일 새벽 4시 40분께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하면서 복도 신발장에 있던 B씨의 재소자용 운동화를 신고 나갔다는 것.

○...운동화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경찰은 구치소 안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다가 A씨의 범행장면을 찾아냈는데, 경찰관에게는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A씨가 출소 과정에서 자신의 슬리퍼 대신 B씨의 운동화를 훔쳐 신고 나간 것"이라고 설명.

/연합뉴스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